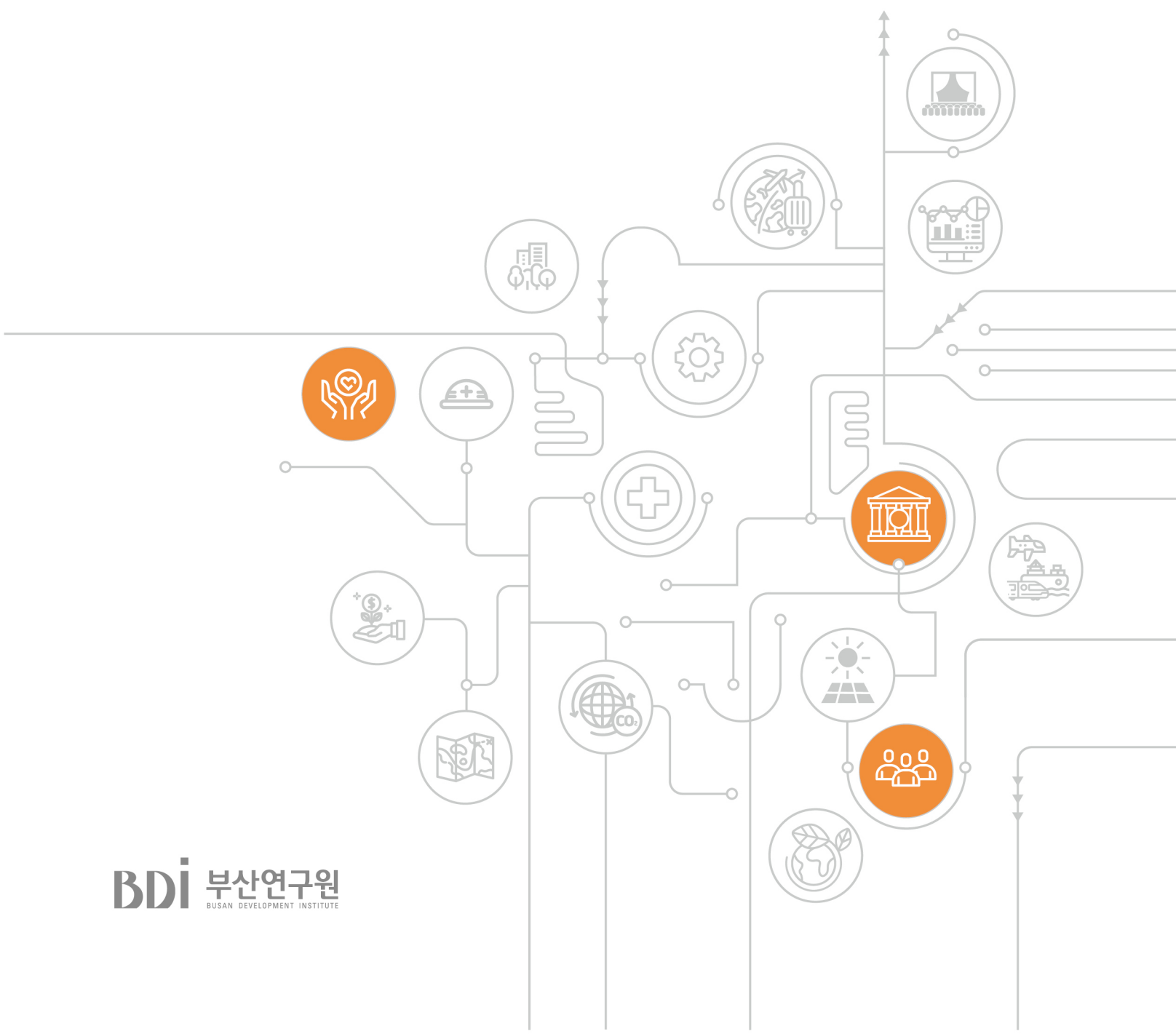


부산 청년의 정주 유도 지원체계 개선방안





손 헌 일 문화·복지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김 세 현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위원

김 아 진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원

※ 겹장에 강조해 표시한 아이콘은 해당 연구 주제를 알기 쉽게 표현한 그림 기호로 아래에 기술한 주제별 키워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합니다.

	행정 및 제도: 법·제도, 조직, 지역분권, 행정통합, 주민자치, 민·관 협력, 거버넌스, 행재정 등		사회 및 복지: 인구, 청소년, 청년, 노인, 여성, 노동, 가구, 공동체, 불평등, 저출생(산), 교육 등
	삶의 질: 행복, 교육, 학습, 인권, 가정, 보험, 연금, 취약 계층, 공정과 정의, 평화, 연대, 성평등, 생활 등		



요 약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주된 원인을 분석하고, 부산 정주의사가 높은 청년의 정책 수요를 토대로 체감성 높은 청년 정주 유도 정책 마련임
- 부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인구 감소와 청년의 지역 외 순유출 증가로 인한 지역의 활력 감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부산시는 청년기본조례 제정(17년)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청년정책을 마련하였지만 한정된 자원의 한계와 청년정책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체감성 높은 정책의 부족과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이 과제(손헌일, 2023)

주요 내용

- 부산시 청년정책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산시 청년정책 및 전달체계의 과제는 ① 정주의사 높은 청년의 정책 수요가 높은 일자리 정책 강화, ② 청년 정주를 위한 필수 정책인 일자리 관련 예산의 증액, ③ 청년정책에 대한 다소 낮은 인지도와 참여경험 해소, ④ 청년정책 기원기관의 분화에 따른 정책 접근 어려움 해소, ⑤ 광역 청년센터의 중간지원조직 역할 다소 부족 ⑥ 사업별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으로 정리됨

정책 제언

- 부산시 청년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홍보강화
-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 대한 소득보전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
- 부산 청년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에 관한 정보 전달 문제로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 인식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정책접근성을 높일 필요(부산연구원, 2024)
- ‘청년공간’이 청년정책의 중간지원체계로서 작동하며 적절한 정책서비스 제공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로서 기능 강화
- 정책의 효과를 진단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 강화를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부산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틀’ 마련, 부산의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틀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과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실효성 분석틀 마련을 통해 개별 사업을 전문가들이 평가 필요

- 부산시 청년정책의 개선을 위한 기타 의견으로 ① 부산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핵심정책 마련 ② 청년정책 관련 주체들간의 소통활성화 ③ 청년정책 체감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청년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④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

※ 연구 주제어: 청년, 정주의사,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청년소득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1) 부산의 청년인구 감소는 지역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	1
	2)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는 부산의 중요한 시정방향	2
	3) 청년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참여율	3
	2. 연구목적	3
제2장	부산시 청년 유출의 원인	5
	1. 부산시 청년인구 현황	5
	1) 청년인구의 비중	5
	2) 부산시 청년인구 이동 현황	7
	2. 부산시 청년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	9
	1) 부산을 떠날 의사	9
	2) 부산을 떠날 의사 결정요인	11
제3장	청년 정주를 위한 부산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15
	1. 부산시 청년정책 추진 기반	15
	1) 청년정책 전담조직 강화	15
	2) 부산시 청년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	15
	3)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추진	16
	4)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투입 예정	17
	5)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공간 조성	20
	2. 청년 정주를 위한 부산시 청년정책 개선과제	21
	1)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필요	21
	2) 청년 일자리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22
	3) 청년정책에 대한 다소 낮은 인지도와 참여경험	23
	4) 청년정책 지원기관의 기능별 분화에 따른 정책접근 어려움	25
	5) 광역 청년센터의 중간지원조직 역할 다소 부족	26
	6) 사업별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한 정책 재구조화 필요	28

제4장	청년정주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31
1.	정주 유도를 위한 청년 정책 개선 방안	31
1)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홍보강화	31
2)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 대한 소득보전 및 자산형성 지원	32
3)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마련	33
4)	청년센터가 청년정책 통로가 되도록 역할 부여	35
5)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지표마련	36
6)	청년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37
2.	정책제언	38
1)	부산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핵심정책 마련	38
2)	청년정책 관련 주체들간의 소통활성화	38
3)	청년정책 체감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확보	38
4)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39
참고문헌		41
부록		43
1.	부산시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정책 현황	43

표 목차

〈표 1-1〉 청년인구 비율(2023년 기준)	1
〈표 2-1〉 부산시 청년인구 비중(주민등록인구 기준)	5
〈표 2-2〉 특·광역시 18~34세 청년인구 비율(2023년 12월 기준)	6
〈표 2-3〉 부산시 청년(18~34세) 순유출 현황	7
〈표 2-4〉 부산 20~39세 청년의 주요 이동 지역: 1인 순이동자 수(2023년 기준)	7
〈표 2-5〉 부산 20~39세 청년의 주요 이동 지역: 1인 순유입자(2023년 기준)	8
〈표 2-6〉 최근 5년간 영남지역에서 부산으로 순유입된 청년 인구(20~24세)	8
〈표 2-7〉 청년패널조사 참여자 인터뷰: 부산에 살고 싶은 주요 이유	10
〈표 2-8〉 부산을 떠나는 주된 이유: 일자리	12
〈표 2-9〉 주요 업종별 청년 비중 및 임금수준	12
〈표 3-1〉 부산시 청년전담 조직의 변화과정	15
〈표 3-2〉 부산시 청년관련 조례 추진 경과	16
〈표 3-3〉 부산시 5년간 청년정책 관련 예산(안)	17
〈표 3-4〉 부산 청년의 정주의사에 따른 정책선호 차이	21
〈표 3-5〉 '23년 청년정책별 예산 현황	23
〈표 3-6〉 주요 청년 활동지원 사업의 변화 내용	27
〈표 4-1〉 타 광역 시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사례	32
〈표 4-2〉 제주도 청년이어드림 개요	34
〈표 4-3〉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틀(안)	36

그림 목차

〈그림 1-1〉 부산시 청년인구 연령대별(5세 단위) 장래인구 추계	1
〈그림 1-2〉 부산시 청년정책(청년G대) 소개	2
〈그림 2-1〉 부산시 전체인구 및 청년인구 변화추이(2014~2023년)	6
〈그림 2-2〉 부산을 떠날 의사(2023년 부산청년패널조사 결과)	9
〈그림 2-3〉 이주선호 지역(2023년 부산청년패널조사 결과)	9
〈그림 2-4〉 부산으로 돌아올 의사(2023년 부산청년패널조사 결과)	10
〈그림 2-5〉 부산을 떠나고자 하는 주요 이유	11
〈그림 2-6〉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11
〈그림 2-7〉 현 직장의 경제적 보상(임금과 복지)에 대한 만족도	13
〈그림 2-8〉 현 직장의 경제적 보상(임금과 복지)에 대한 만족도	13
〈그림 2-9〉 일과 자신의 역량 수준과의 일치도	14
〈그림 2-10〉 향후 1년 이내 이직할 의사	14
〈그림 2-11〉 이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14
〈그림 3-1〉 부산시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17
〈그림 3-2〉 청년세대를 위한 부산시가 강화해야 할 사업분야	18
〈그림 3-3〉 연령별 정책우선순위의 차이	18
〈그림 3-4〉 연령대별 정책 수요에 대한 FGI분석 결과	19
〈그림 3-5〉 부산시 청년활동 공간 지도	20
〈그림 3-6〉 부산시 10대 청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2022년)	24
〈그림 3-7〉 부산 청년들의 주요 문화여가 활동 지역과 청년 공간 배치도	28
〈그림 4-1〉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환류체계	37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1) 부산의 청년인구

감소는 지역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

○ 부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인구 감소와 청년의 지역 외 순유출 증가로 인한 지역의 활력 감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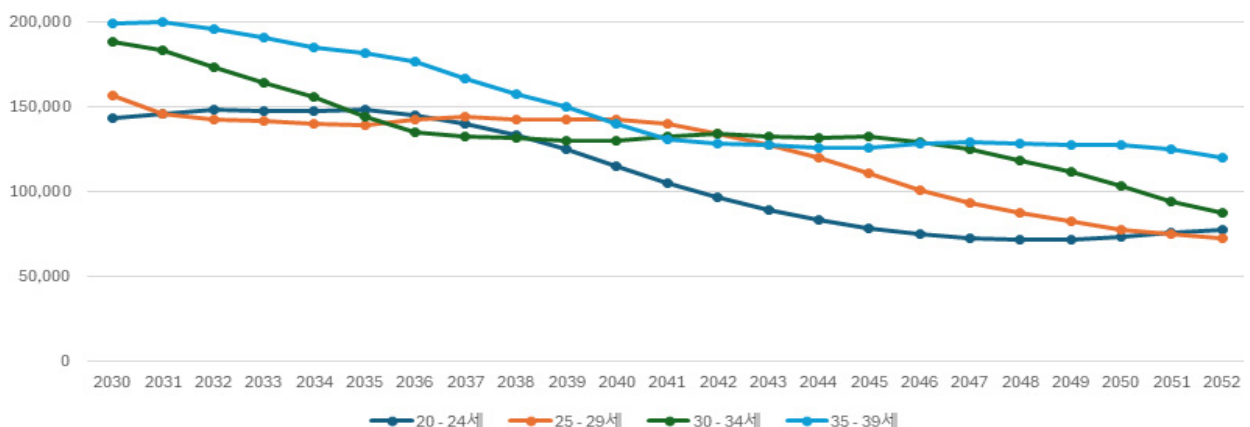
- 부산의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인구 비율은 19.4%(18세~39세는 25.2%)로 전국 평균(20.7%)보다 낮고, 특광역시 중 청년인구 비중이 가장 낮음

〈표 1-1〉 청년인구 비율(2023년 기준)

구분	계	18-34세		18-39세	
	인구수(명)	인구수(명)	비율(%)	인구수(명)	비율(%)
전국	51,145,885	10,570,137	20.7%	13,791,503	27.0%
특광역시	21,929,034	4,896,048	22.3%	6,319,464	28.8%
서울특별시	9,334,934	2,290,755	24.5%	2,944,502	31.5%
부산광역시	3,291,326	639,891	19.4%	830,838	25.2%
대구광역시	2,372,562	476,847	20.1%	612,761	25.8%
인천광역시	2,966,979	632,252	21.3%	829,941	28.0%
광주광역시	1,420,562	313,420	22.1%	399,897	28.2%
대전광역시	1,438,846	327,944	22.8%	417,379	29.0%
울산광역시	1,103,825	214,940	19.5%	284,147	25.7%

자료 : 통계청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1세별), 검색일: 2024년 8월 1일

○ 부산 청년의 장래인구는 2018년 80만 명 수준에서 2045년에는 50만 명 수준 이하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자료 : 통계청 KOSIS(장래인구추계), 검색일: 2024년 8월 1일

〈그림 1-1〉 부산시 청년인구 연령대별(5세 단위) 장래인구 추계

2)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는 부산시의 중요한 시정방향

- 부산시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중요한 시정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
 - 산업구조 개편과 코로나19 이후 고용상황 악화, 주거 불안정, 부채증가, 우울감 등 청년의 삶 전반에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청년의 삶 개선을 통한 지역내 정주를 유도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강조
- 부산은 청년의 자생력을 키우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지(G)대’ 사업 추진
 - 부산시는 2017년 「청년 디딤돌 플랜」을 시작으로 2019년 「청년정책 로드맵」, 2022년 「청년G대 부산」 등 그동안 일자리, 주거, 문화 등 개별 영역에서 다루어지던 정책들을 하나의 청년정책으로 묶고 시의성 있는 대표사업을 추진
 - 2024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권리 영역에 걸쳐 98개 사업에 3,119억 원의 예산을 투입(2024년 기준)하고 있으며, 4대 분야 2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청년G대

부산청년을 위한 탄탄한 지대를 구축하는 부산시 청년정책 브랜드

일자리,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네이밍으로, 확장성을 고려하여 알파벳 G로 세부 정책 브랜딩



자료 : 청년G대 홈페이지(<https://young.busan.go.kr/index.nm?menuCd=20>)

〈그림 1-2〉 부산시 청년정책(청년G대) 소개

3) 청년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참여율

- 다양한 청년정책 생산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다소 낮은 인지도와 참여경험은 청년정책의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
 - 부산시는 청년기본조례 제정(17년)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청년정책을 마련하였지만 한정된 자원의 한계와 청년정책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체감성 높은 정책의 부족과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이 과제(손현 일, 2023)
 - 부산청년패널조사(2023)에 따르면, 부산시 10대 주요 청년 정책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0%에 육박하여 정책 접근성이 낮아 정책지원이 절실한 취약청년 발굴 및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에 정주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 정주 의사가 높은 부산 청년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체감성 높은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음
 - 부산을 떠나는 주된 원인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정주의사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 분야 제시
 - 부산 정주의사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
 - 기타 정주유도를 위한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안

제2장. 부산시 청년 유출의 원인

1. 부산시 청년인구 현황

1) 청년인구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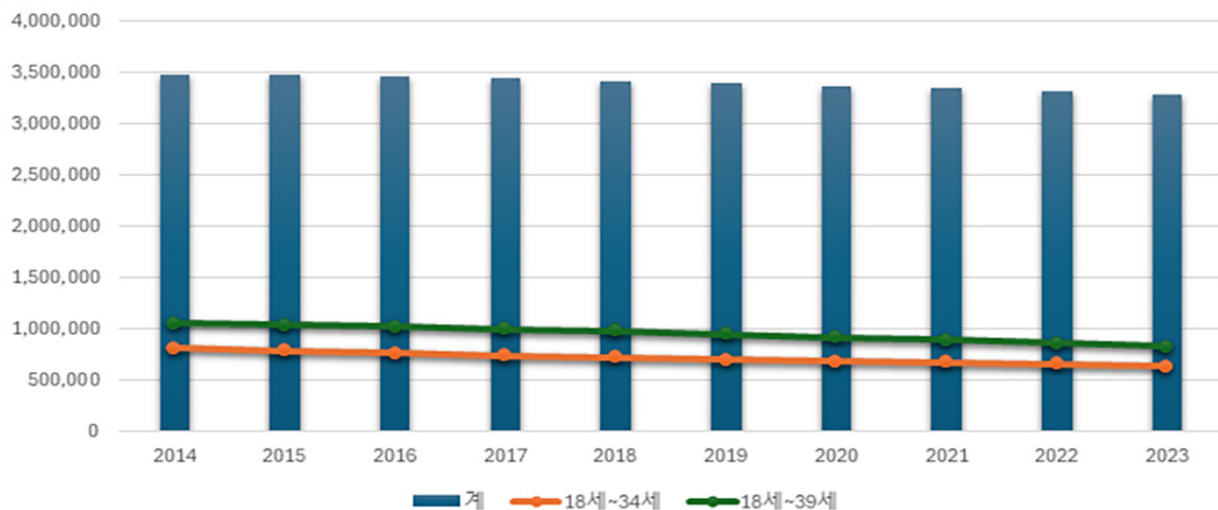
-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2024년 현재 기준)
 - '23년 11월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18세 이상 34세 이하이던 청년의 연령 기준은 39세까지로 확대
 - 청년연령 기준의 상향의 이유는 ① 학업에서 취·창업 등 이행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하고, ② 타시·도와 형평성을 고려(17개 시도 중 11곳이 19~39살을 청년으로 정하고 있고, 부산만 유일하게 18세를 포함)
 -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청년 연령별 세분화된 정책 수요 반영 필요
- 최근10년간(2014~2023년) 부산시 청년인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 23.3%에서 2023년 19.4%(18세 이상 34세 이하)로 3.9%p 감소
 - 39세까지 확대된 기준으로 비교하면 30.3%(2014년)에서 25.2%(2023년)로 5.1%p 감소

〈표 2-1〉 부산시 청년인구 비중(주민등록인구 기준)

시점	부산시 전체인구(명)	18세~34세		18세~39세	
		인구수(명)	비율(%)	인구수(명)	비율(%)
2014	3,485,394	810,674	23.3%	1,054,746	30.3%
2015	3,478,811	791,145	22.7%	1,038,161	29.8%
2016	3,467,418	768,441	22.2%	1,021,781	29.5%
2017	3,445,833	744,120	21.6%	1,001,461	29.1%
2018	3,418,068	722,209	21.1%	978,995	28.6%
2019	3,390,159	703,950	20.8%	952,522	28.1%
2020	3,366,576	687,931	20.4%	921,584	27.4%
2021	3,343,353	672,676	20.1%	890,494	26.6%
2022	3,316,707	657,061	19.8%	859,513	25.9%
2023	3,291,326	639,891	19.4%	830,838	25.2%

자료 : 통계청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1세별), 검색일: 2024년 8월 1일

- 청년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이슈이며, 특히 비수도권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부산의 경우 그 심각성이 높은 편
- 부산 청년인구의 감소는 전체 인구 감소의 중요한 요인
-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구는 지난 10년간 170,783명 감소하여 부산시 전체인구 감소 인원인 194,068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청년인구의 감소가 지역인구 감소의 중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1세별), 검색일: 2024년 8월 1일

〈그림 2-1〉 부산시 전체인구 및 청년인구 변화추이(2014~2023년)

- 부산시 청년(18세~34세)은 639,891명(2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의 19.4%로 특·광역시 중 청년(18세~34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편
- 청년인구 비중은 서울(24.5%)보다 5%이상 차이가 나고, 전국 평균(20.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비교하면 타 특·광역시와의 차이가 더 확대

〈표 2-2〉 특·광역시 18~34세 청년인구 비율(2023년 12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국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체인구(명)	10,570,137	639,891	2,290,755	476,847	632,252	313,420	327,944	214,940
18~34세(비율.%)	20.7%	19.4%	24.5%	20.1%	21.3%	22.1%	22.8%	19.5%
18~39세(비율.%)	27.0%	25.2%	31.5%	25.8%	28.0%	28.2%	29.0%	25.7%

자료: 통계청 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1세별)

2) 부산시 청년인구 이동 현황

- 지난 10년간 연 평균 7,664명의 부산 청년(18~34세)이 순유출
 - 청년 순유출 인원은 2018년 10,779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
 - 팬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순유출된 청년인구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전체 순유출자 중 청년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
 - 2023년 순유출자 중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비중은 45.6%

〈표 2-3〉 부산시 청년(18~34세) 순유출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18~34세(명)	8,637	6,956	8,648	9,535	10,779	9,482	5,418	6,477	5,488	5,217	7,664
전체(명)	15,092	13,560	21,392	28,398	26,759	23,354	14,347	18,903	13,562	11,432	18,680
18~34세 (비율, %)	57.2	51.3	40.4	33.6	40.3	40.6	37.8	34.3	40.5	45.6	41.0

자료: KOSIS(국내인구이동통계)

- 부산 청년들의 주요 순유출 지역은 수도권
 - 부산 청년(20세~39세)의 순유출이 많은 지역은 수도권으로 2023년 기준, 8,657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
- 수도권으로의 순유출과 달리 영남지역에서는 오히려 부산으로 청년이 유입
 - 2023년 기준 2,902명이 영남지역에서 부산으로 순유입

〈표 2-4〉 부산 20~39세 청년의 주요 이동 지역: 1인 순이동자 수(2023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부산 → 영남권(경남, 울산, 대구, 경북)	-3,233	-4,553	316	537	467
부산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8,657	3,210	4,059	1,081	307
부산 → 비수도권·비영남지역	564	-309	781	330	93

자료: KOSIS(국내인구이동통계)

- 부산 청년의 주요 순유출 지역은 서울(5,528명)이고, 순유입 지역은 경남(2,327명)

-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4세 청년은 순유입(1,652명)되는 추세이지만 25세~29세 청년의 순유출 인원(5,156명)이 가장 많은 편
- 부산은 비교적 풍부한 대학으로 인해 진학을 목적으로 청년들이 유입되지만 일자리를 찾는 시기인 25~29세에 유출인원이 집중되어 일자리 문제해결이 중요함을 시사

〈표 2-5〉 부산 20~39세 청년의 주요 이동 지역: 1인 순유입자(2023년 기준)

(단위: 명)

구분	부산→영남지역				부산→비영남지역			부산 → 비수도권	소계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서울	인천	경기		
소계	2,327	197	423	286	-5,528	-417	-2,712	-564	-5,988
20 - 24세	2,983	615	322	633	-2,347	-104	-759	309	1,652
25 - 29세	61	-336	130	-171	-2,583	-229	-1,247	-781	-5,156
30 - 34세	-359	-63	-14	-101	-480	-67	-534	-330	-1,948
35 - 39세	-358	-19	-15	-75	-118	-17	-172	-93	-867

자료: KOSIS(국내인구이동통계)

주1: -는 유출인원임

- 부산은 청년이 떠나기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모이는 도시’
- 최근 5년간 연평균 4,583명의 20~24세 청년이 영남지역에서 부산으로 순유입
- 부산으로 이주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경우 청년이 모여 역동성이 넘치는 도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

〈표 2-6〉 최근 5년간 영남지역에서 부산으로 순유입된 청년 인구(20~2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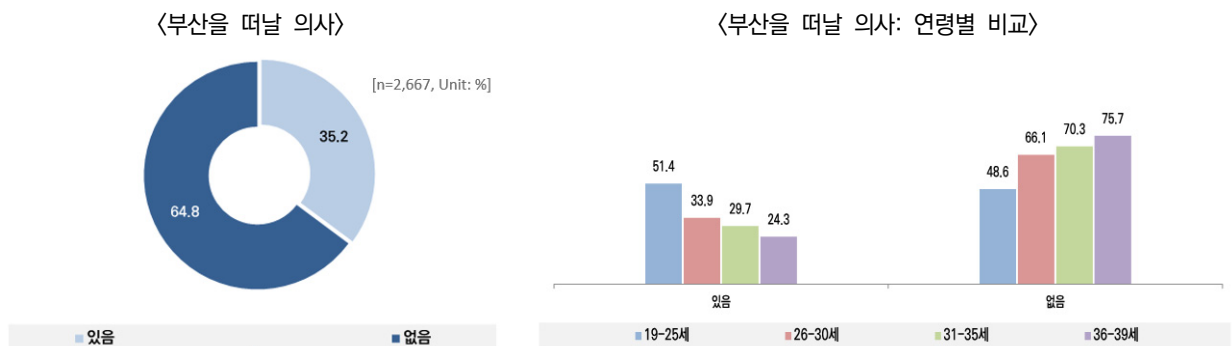
전출지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대 구	285	167	296	175	322	249
울 산	658	814	632	679	615	680
경 북	727	833	638	848	633	736
경 남	2,458	2,784	2,955	3,411	2,983	2,918
소 계	4,128	4,598	4,521	5,113	4,553	4,583

자료: KOSIS(국내인구이동통계)

2. 부산시 청년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

1) 부산을 떠날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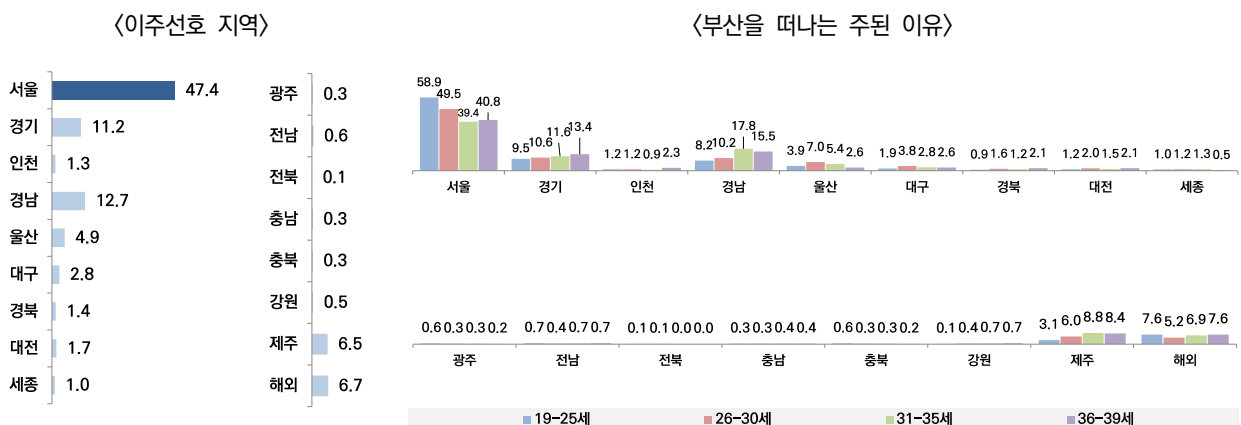
- 부산을 떠날 의사가 낮은 정도를 정주의사로 정의할 수 있음
- 2023 부산청년패널조사(2024) 응답자의 35.2%가 부산을 떠날 의사를 밝힘
 - 2022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8.8%가 부산을 떠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전년도 대비 부산을 떠날 의사가 6.4%p 증가



자료: 2023 부산청년패널조사(2024)

〈그림 2-2〉 부산을 떠날 의사(2023년 부산청년패널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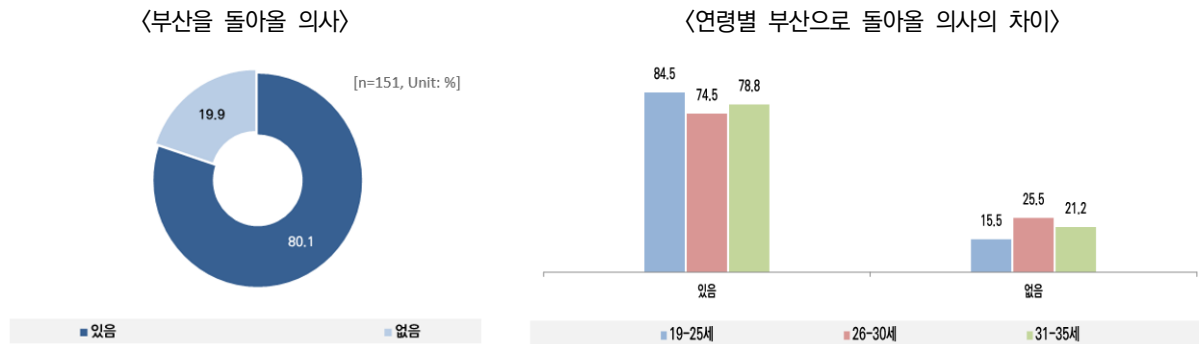
- 부산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에서 거주해야 할 경우 선호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경남 순으로 수도권에 대한 이주 선호 비율이 높은 편



자료: 부산청년패널조사(2023)

〈그림 2-3〉 이주선호 지역(2023년 부산청년패널조사 결과)

- 부산을 떠나 타지역으로 이주한 청년(151명) 중 80.1%는 부산으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고 응답
 - 부산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경우 부산을 떠난 청년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자료: 2023 부산청년패널조사(2024)

〈그림 2-4〉 부산으로 돌아올 의사(2023년 부산청년패널조사 결과)

- 2023 부산청년패널조사에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FGI 결과 부산의 여유로움과 대도시가 갖는 비교적 풍부한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도시로 인식
 - 타지역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적정도시로서 긍정적 인식이 강하여 다시금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의 가능성이 있음

〈표 2-7〉 청년패널조사 참여자 인터뷰: 부산에 살고 싶은 주요 이유

서울에서 짧게 살아보기도 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일단 사람 너무 많은 게 조금 싫었어요. **부산이 사실 좋은 이유가 사람도 좀 적당하게 있고 인프라도 사실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편이고 지하철로도 대중교통으로도 사실 어디든 갈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바다 있는 게 좋아요**

(취업준비생, 28세, 남성)

서울에 사는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친구의 성향이긴 한데 사람 너무 많은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은 여유가 느껴지는데** 서울은 너무 사람도 많고 밀집도가 높아서...

(외항사 승무원, 27세,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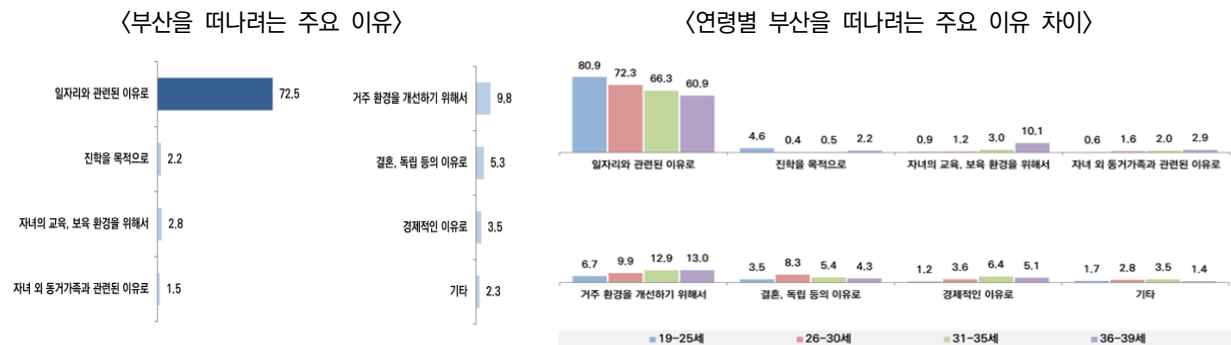
친구들 6~7명은 서울 사는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부산에서 일하다가 서울 가는 애가 월급은 많이 받고 있는데 막상 본인 혼자서 거기 살다 보니까 힘든가 보더라고요.

(중소기업 제조업, 35세, 남성)

자료: 부산청년패널조사(2023)

2) 부산을 떠날 의사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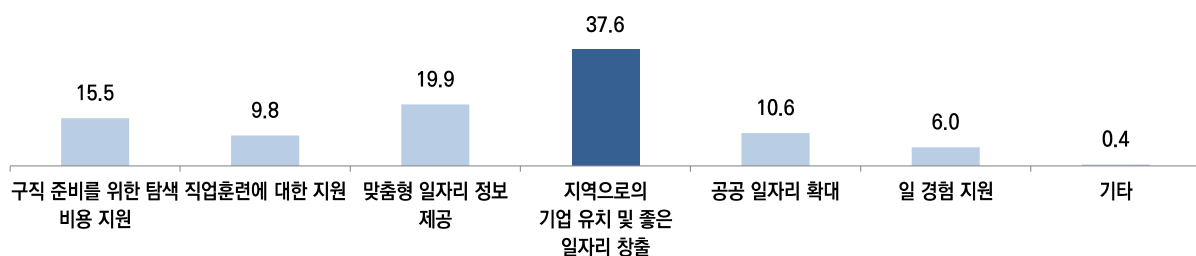
- 부산을 떠나고자 하는 주된 원인은 ‘일자리(72.5%)’
 - 부산을 떠나려는 주요 이유는 연령대에 관계없이 ‘일자리 관련 이유’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거주환경 개선’ 목적 비중이 증가
 - 수도권 지역 20대 취업자 분포 비율(‘07년 50.4%→’22년 58.1%)은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의 비율(‘07년 49.6%→’22년 43.9%)은 감소(한국고용정보원, 2024)



자료: 2023 부산청년패널조사(2024)

〈그림 2-5〉 부산을 떠나고자 하는 주요 이유

- ‘지역으로의 기업유치 및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 부산을 떠나는 주요 원인이 청년선호형 일자리 부족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산에서 머물면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됨



자료: 2023 부산청년패널조사(2024)

〈그림 2-6〉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 ‘22년 부산청년패널조사에서는 이주의사가 없었지만’ 23년 이주의사를 밝힌 청년 대상 FGI 결과, 이주의사의 주된 이유는 ‘임금수준’과 ‘일자리 풍부성’

〈표 2-8〉 부산을 떠나는 주된 이유: 일자리

(취업준비생, 23세, 남성)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월급도 적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별로 안 보여가지고...사실 취직하려면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더라고요.

(군무원, 32세, 여성) 일자리 종류가 서울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부산은 해당 직무로 한 명 뽑을까 말까하고 서울은 보니까 T/O가 많긴 하더라고요. (중략) 부산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 예를 들면 220을 주는데 서울은 280을 주니까요.

(사무직, 24세, 여성) 수도권은 물가가 비싼 만큼 월급도 지금 저의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받더라고요.

자료: 2023 부산청년패널조사(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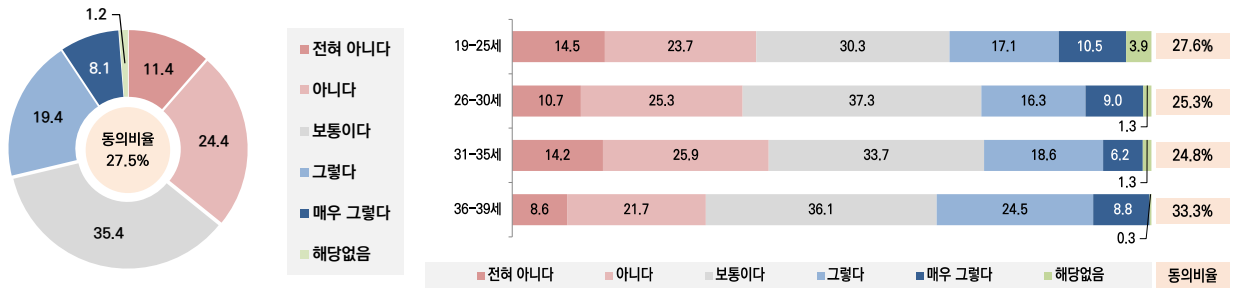
- 부산청년패널조사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소득’이지만, 청년들의 희망 소득과 실제 임금의 차이가 큰 편
- 부산 청년 임금수준은 전국 대비 월 27만원 정도 낮은 수준(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은 편

〈표 2-9〉 주요 업종별 청년 비중 및 임금수준

구분	청년 비중		청년 임금		임금 차이 (a-b)
	전국	부산	전국(a)	부산(b)	
제 조 업	17.6	12.9	305	273	3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공급업	0.4	0.7	390	414	-24
수도/하수/폐기물/원료 재생업	0.4	0.2	288	292	-4
건 설 업	4.4	6.6	295	285	10
도매 및 소매업	11.5	13.7	234	219	15
운수 및 창고업	3.5	5.2	280	286	-7
숙박 및 음식점업	11.8	17.6	158	155	3
정보통신업	6.7	3.4	318	242	76
금융 및 보험업	2.7	2.3	345	276	69
부동산업	0.7	0.6	265	224	4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6	4.1	320	282	38
사업시설 관리/ 임대 서비스업	3.6	4.4	260	225	35
공공 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4.7	4.3	273	269	4
교육 서비스업	8.0	6.6	219	212	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8	11.1	269	256	13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2.6	2.5	195	186	9
협회/단체/수리/개인 서비스업	2.9	3.4	228	240	-12
Total	100.0	100.0	262	235	27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C형(2023년) 상반기, 원시자료, 노동권익센터(2024)

- 현 직장의 경제적 보상(임금과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
- 응답자의 36.8%는 현재 직장의 경제적 보상에 불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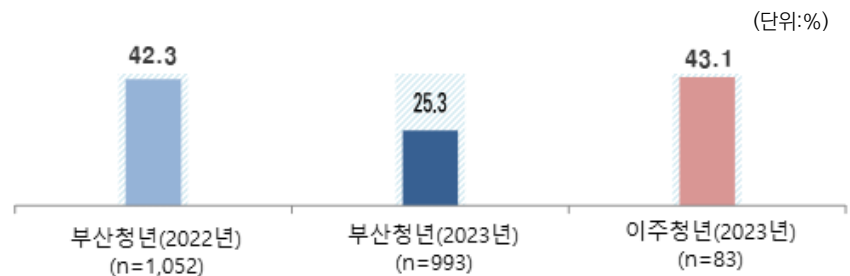


자료: 부산청년패널조사(2023)

〈그림 2-7〉 현 직장의 경제적 보상(임금과 복지)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직장의 임금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작년조사('22년) 대비 17.0%p 감소했고, 부산에서 일하는 청년의 임금만족도 동의 비율이 이주 청년 대비 17.8%p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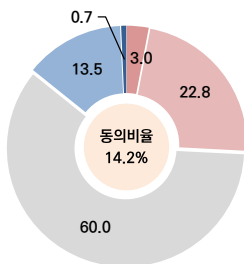
자료: 2023 부산청년패널조사(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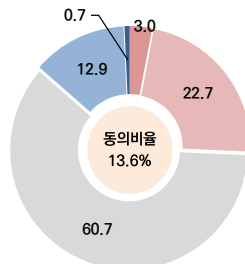
〈그림 2-8〉 현 직장의 경제적 보상(임금과 복지)에 대한 만족도

- 응답자 10명 중 3명은 개인의 학력과 기술수준 보다 낮은 일자리에서 근무한다고 응답
- 학력수준에 비해 하고 있는 일의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25.8%, 기술보유 수준에 비해 하고 있는 일의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25.7%
- 응답자의 43.0%(전혀 아니다+아니다)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이 전공과 불일치한다고 응답하여 교육수준과 직무를 연결하는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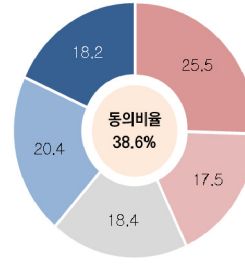
〈일-학력 수준 적합성 인식〉



〈일-기술 수준 적합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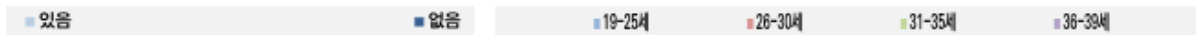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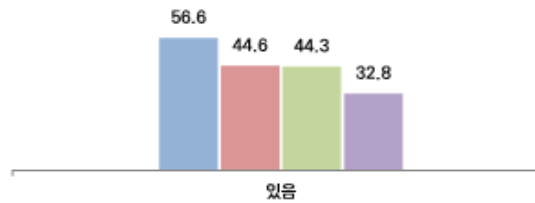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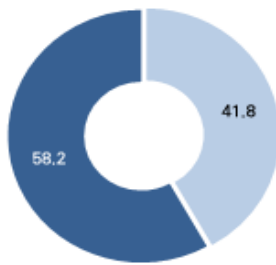
〈일-전공일치도 인식〉



자료: 부산청년패널조사(2023)

〈그림 2-9〉 일과 자신의 역량 수준과의 일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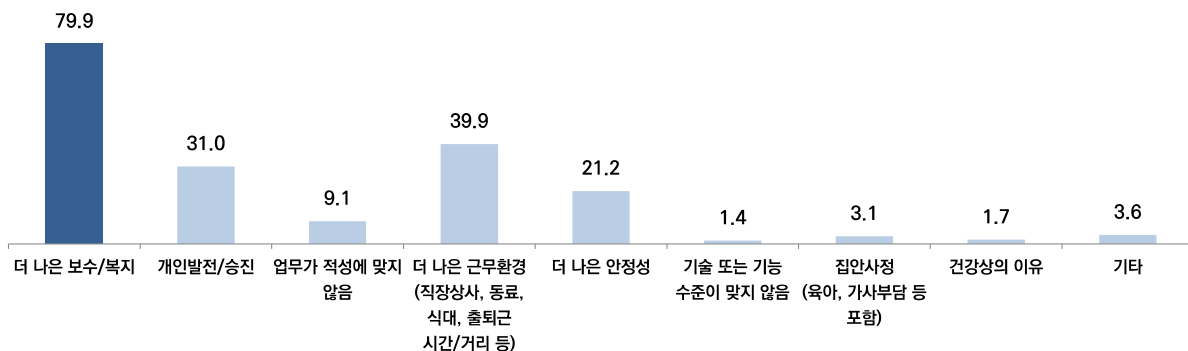
- 응답자 10명 중 4명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향후 1년 내 이직 의사
 - 향후 1년 이내에 이직할 의사가 41.8%로 나타남
 - 19~25세의 56.6%는 향후 1년 내 이직 의사가 가장 높고, 이어서 26~30세 (44.6%), 31~35세(44.3%), 36~39세(32.8%) 순



자료: 부산청년패널조사(2023)

〈그림 2-10〉 향후 1년 이내 이직할 의사

- 이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더 나은 보수/복지'(79.9%),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 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39.9%), '개인발전/승진'(31.0%) 순



자료: 부산청년패널조사(2023)

〈그림 2-11〉 이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

제3장. 청년 정주를 위한 부산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1. 부산시 청년정책 추진 기반

1) 청년정책 전담조직 강화

- 청년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5년 청년취업지원팀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지속적으로 강화
- 청년산학국 내 3개과(청년희망정책과, 지산학협력과, 창조교육과) 중 청년희망정책과가 주로 청년정책을 주도
 - 청년희망정책과는 5개 팀(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단, 청년생활팀, 청년문화팀, 청년활동팀), 34명으로 구성('23년 5월 31일 기준)

〈표 3-1〉 부산시 청년전담 조직의 변화과정

시기	내용
'15년 7월	청년취업지원팀 (2명/신성장사업국-창업지원과-취업지원팀)
'17년 7월	청년정책팀 신설 (2명/시장-시정혁신본부-비전추진단-청년정책팀)
'18년 8월	청년정책담당관 (7명/시민행복추진본부-정책정책담당관)
'19년 8월	청년희망정책과 (19명/성장전략국-청년희망정책과)
'21년 6월	청년희망정책과 (32명/디지털경제혁신실-청년산학창업국-청년희망정책과)
'23년 5월	청년희망정책과 (5개팀 34명/디지털경제혁신실-청년산학국-청년희망정책과)

2) 부산시 청년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

-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추진의 기초가 되는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 2013년 5월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년 12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마련
 - 2017년 5월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도입하면서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청년기본조례로 통합

〈표 3-2〉 부산시 청년관련 조례 추진 경과

시기	내용
'13.5	-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목적 : 청년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
'13.12	-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 - 목적 :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17.5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 목적 : 부산광역시 청년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에 기여함 - 기본이념 :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 ※ 청년기본 조례에 청년문화 및 청년일자리 관련 조례가 통폐합, ※ 17년 5월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7차례 일부개정이 이루어짐
'22.1	-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목적 :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부산광역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도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
'22.2	-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 목적 : 부산광역시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3.4	-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정 - 목적 : 청년의 학업, 취업,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과 주택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

자료: 엄창환(2022)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3) 청년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시정 방향으로 설정하고, 청년들의 지역내 정주를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
 - 부산시는 2022년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지(G)대 구축 사업 추진
 - 일자리, 주거·생활, 문화·활동, 참여·권리 등 4개 분야로 체계화
 -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청년월세지원사업(2019년 추진)의 경우 2022년 국가차원의 정책(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확대
- 부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이 2020년 서울시로 확대되고, 2022년은 국토부에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확대
- 제2차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5대 분야 중점정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¹⁾

1)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예산은 부록을 참조할 것



자료: 청년G대 홈페이지

〈그림 3-1〉 부산시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4) 청년 정책 관련 예산 증액

- 부산시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4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5대 분야 55개사업에 총 1조 9,092억원을 투입할 예정
-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23년 2,234억원에서 '24년 3,120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청년의 지역 외 유출을 막기 위해 매년 청년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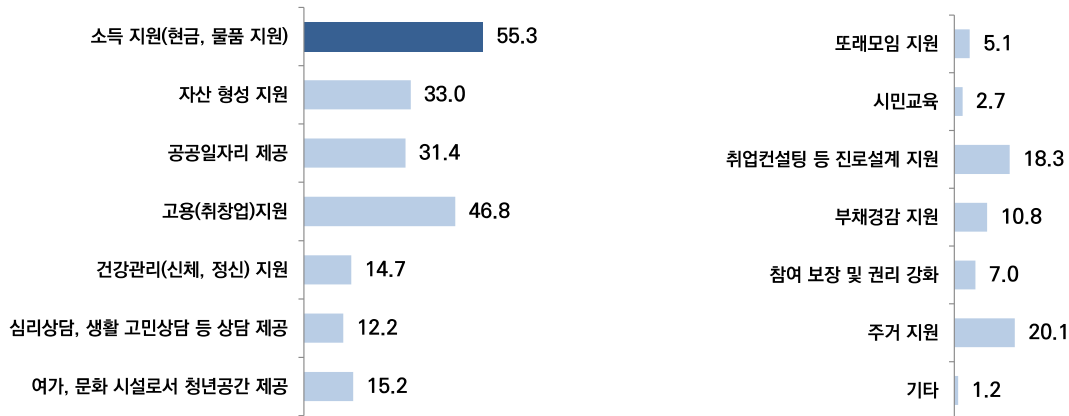
〈표 3-3〉 부산시 5년간 청년정책 관련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활력·참여	생활인구	소계
예산액	94,784	163,811	1,493,322	124,600	22,529	10,250	1,909,296
비율(%)	5.0%	8.6%	78.2%	6.5%	1.2%	0.5%	100.0%

자료: 청년G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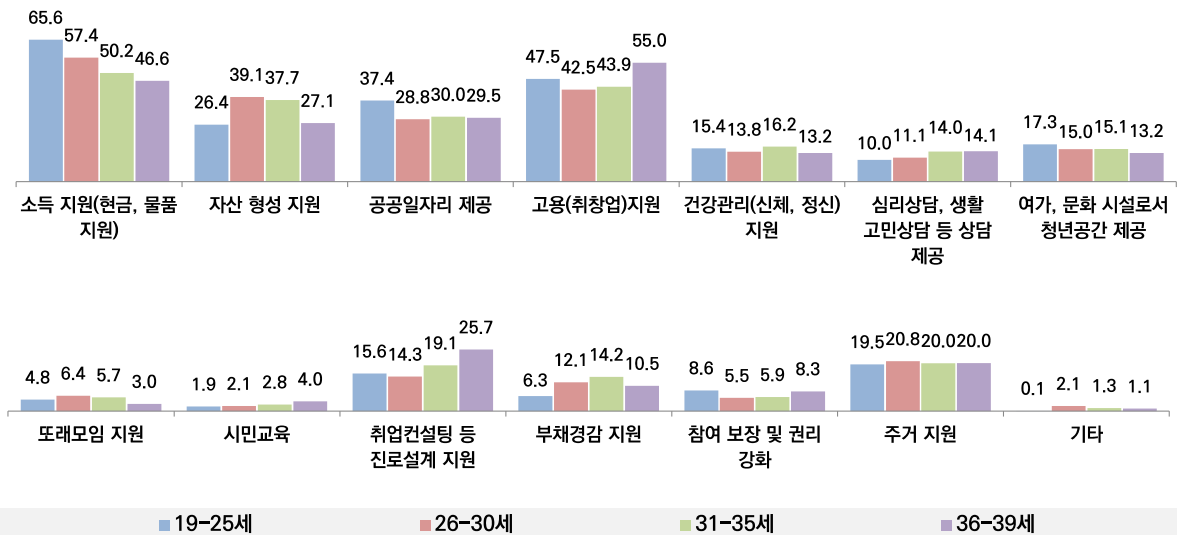
- 제한된 자원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아 정책에 대한 효능감에 대한 고민이 필요
- 2023년 부산청년패널조사에서 청년세대를 위해 가장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
- '소득 지원(현금, 물품 지원)'(55.3%), '고용(취창업)지원'(46.8%), '자산 형성 지원'(33.0%) 등의 순



자료: 2023 부산청년패널조사(2024)

〈그림 3-2〉 청년세대를 위한 부산시가 강화해야 할 사업분야

○ 연령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책 마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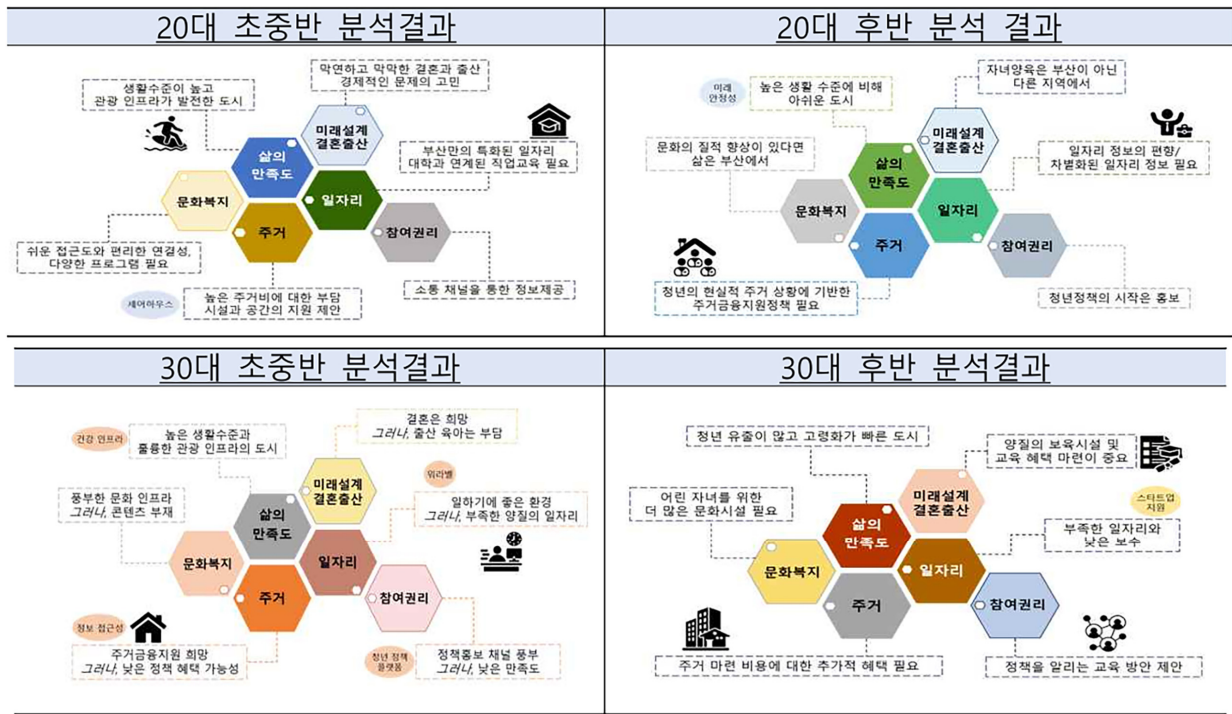


자료: 2023 부산청년패널조사(2024)

〈그림 3-3〉 연령별 정책우선순위의 차이

-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정책 선호에 대한 차이가 발견
 - (20대 초반) 관광도시로서 가능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짐
 - (20대 후반) 부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경력직 위주 직원 채용과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을 가짐

- (30대 초반) 부산에 대해 매력을 느끼나, 급속한 고령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요구
- (30대 후반) 쾌적한 환경을 가진 도시지만, 수도권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 양질의 보육환경 부족, 내집마련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음



자료: 제2차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그림 3-4〉 연령대별 정책 수요에 대한 FGI분석 결과

-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라 청년들의 체감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책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
- 부산 청년 기쁨두배 통장과 같은 사업의 경우 청년들에 관심이 높은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만기시 발생한 소득을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될 필요

5) 부산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 조성

- 부산의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청년들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부산청년센터 운영('21년 4월 개소)
- 청년센터 외에도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
 - 부산시에서 7개 공간, 구·군에서는 총 18개 공간을 운영(2023 부산청년정책)
 - 청년의 생활권 중심으로 청년 공간의 지역별 고른 분포를 위해 2026년까지 구·군별 1개소씩 총 16개소의 청년 활동 공간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
- 청년공간이음 사업을 통해 운영을 지원할 예정
 - 청년공간이음 사업은 청년의 15분 생활권에 활력을 더하고 청년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 공간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 제고와 공공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이 목적
 - 영도구 창업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6개 청년공간에 현판을 설치하고, 고유의 브랜딩화를 추진



〈그림 3-5〉 부산시 청년활동 공간 지도

2. 청년 정주를 위한 부산시 청년정책 개선과제

1) 정주의사 높은 청년의 정책 수요 높은 일자리 정책 강화가 필요

- 정주 의사가 높은 청년들의 정책 수요 발굴에 대한 관심이 필요
- 정주 의사가 높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책 분야별 대표정책 발굴 및 해당 사업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정책 체감성 높일 필요
- 정주의사가 높은 청년의 수요가 높은 고용(취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강화가 필요
 - 2022년 부산청년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의사에 따른 청년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었음
 - 부산을 떠날 의사가 없는 청년의 경우 소득 지원에 대한 정책수요 보다는 고용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았음

자료: 2022년 부산청년패널조사 (2023)

〈표 3-4〉 부산 청년의 정주의사에 따른 정책선호 차이

구분	부산을 떠날 의사 있음	부산을 떠날 의사 없음
1순위	소득 지원(현금, 물품 지원)	고용(취창업)지원
2순위	고용(취창업)지원	소득 지원(현금, 물품 지원)
3순위	공공일자리 제공	공공일자리 제공

- 부산지역 일자리는 낮은 임금수준, 직무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취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산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남

〈부산을 떠나는 주된 이유: 일자리〉

(취업준비생, 23세, 남성)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월급도 적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별로 안 보여가지고...사실 취직하려면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더라고요.

(군무원, 32세, 여성) 일자리 종류가 서울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부산은 해당 직무로 한 명 뽑을까 말까하고 서울은 보니까 T/O가 많긴 하더라고요. (중략) 부산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 예를 들면 220을 주는데 서울은 280을 주니까요.

(사무직, 24세, 여성) 수도권은 물가가 비싼 만큼 월급도 지금 저의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받더라고요.

자료: 2023 부산청년패널조사(2024)

2) 청년 정주를 위한 필수 정책인 일자리 예산의 증액 필요

- 제한된 자원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아 정책에 대한 효능감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청년들의 지역이탈의 주요 원인이 일자리인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관련으로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마련 및 관련 예산이 투입될 필요
- 청년들은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는데 반해 일자리 관련 정책 예산은 전체의 5.0%에 불과
- 부산 청년은 전국 대비 월 27만원 정도 낮은 임금(2023년 상반기 기준)을 받고 있어 청년들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득 부족분에 대한 차이를 매울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 강화 필요

〈주요 업종별 청년 비중 및 임금수준〉

구분	청년 비중		청년 임금		임금 차이 (a-b)
	전국	부산	전국(a)	부산(b)	
제 조 업	17.6	12.9	305	273	3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공급업	0.4	0.7	390	414	-24
수도/하수/폐기물/원료 재생업	0.4	0.2	288	292	-4
건 설 업	4.4	6.6	295	285	10
도매 및 소매업	11.5	13.7	234	219	15
운수 및 창고업	3.5	5.2	280	286	-7
숙박 및 음식점업	11.8	17.6	158	155	3
정보통신업	6.7	3.4	318	242	76
금융 및 보험업	2.7	2.3	345	276	69
부동산업	0.7	0.6	265	224	4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6	4.1	320	282	38
사업시설 관리/ 임대 서비스업	3.6	4.4	260	225	35
공공 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4.7	4.3	273	269	4
교육 서비스업	8.0	6.6	219	212	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8	11.1	269	256	13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2.6	2.5	195	186	9
협회/단체/수리/개인 서비스업	2.9	3.4	228	240	-12
Total	100.0	100.0	262	235	27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C형(2023년) 상반기, 원시자료, 노동권익센터(2024)

- 청년 삶 개선을 목적으로 단일 사업에 획기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대표 정책(부산만의 정책)’ 부족

- 2023년 대비 부산시 청년G대 사업은 총 23개 감소(121개→98개), 예산은 886 억원 증가(2,234억원→3,120억원)
- 교육관련 사업비 증가를 제외하면 '23년 기준 소폭 증가(교육분야 제외 시비 51억원 증가)이며, 시비 비중(40.2%→36.3%)은 축소
- 교육관련 예산은 RISE 관련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 청년선호가 높은 복지·문화 사업은 오히려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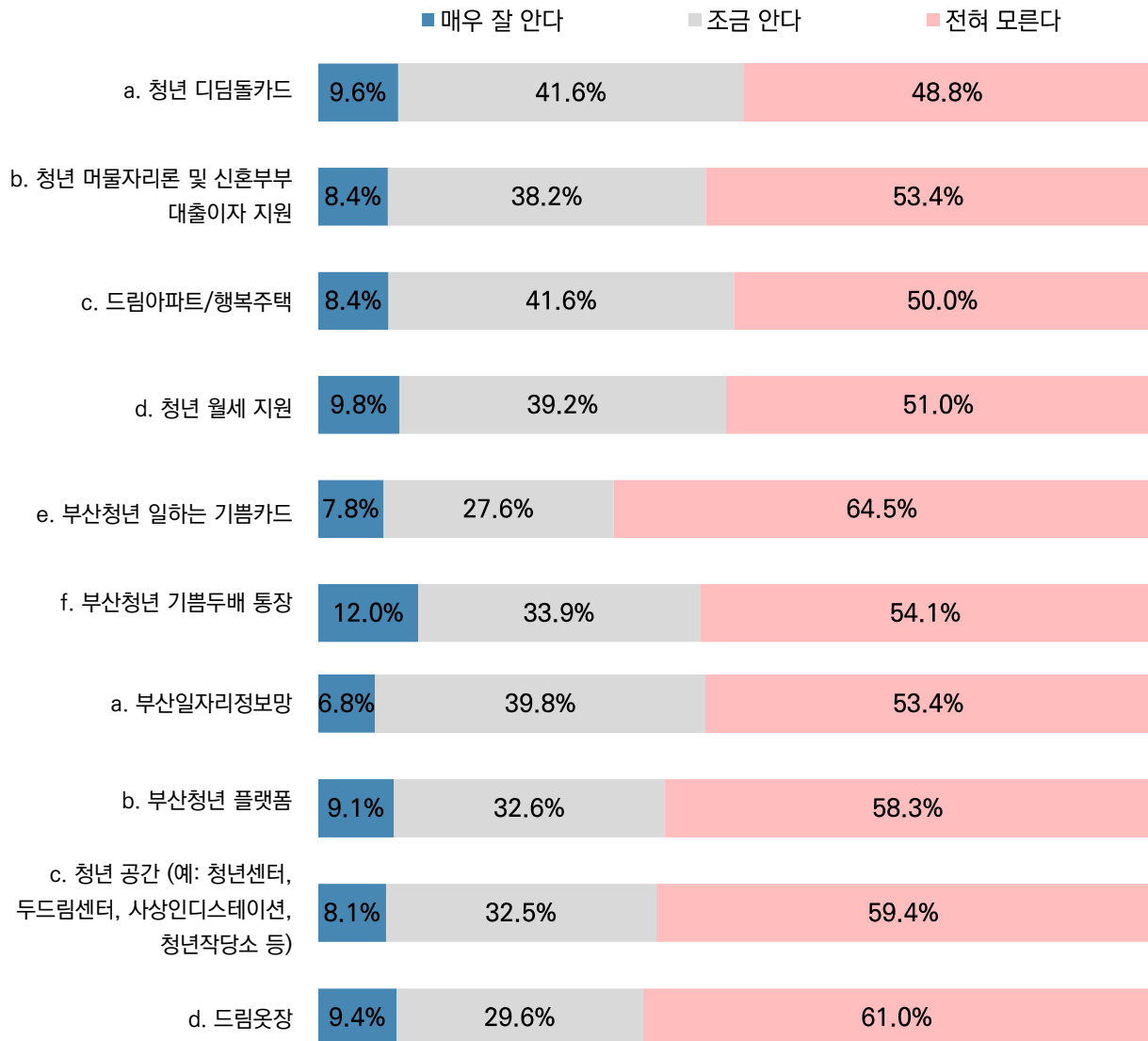
〈표 3-5〉 '23년 청년정책별 예산 현황

(단위: 개, %, 백만원)

구분	사업수		2023년				2024년				
	23년	24년	계	국비	시비	구·군비	계	국비	시비	구·군비	기타
총 계	121	98	223,350	129,912 (58.2%)	9,732 (40.2%)	3,706 (1.6%)	311,927	185,814 (59.6%)	113,230 (36.3%)	2,467 (7.9%)	10,416 (3.3%)
일자리	26	27	44,116	18,762 (42.5%)	23,779 (53.9%)	1,575 (3.6%)	50,768	26,750 (52.%)	21,820 (43.0%)	996 (2.0%)	1,140 (2.2%)
주 거	13	11	77,636	61,510 (79.2%)	15,220 (19.6%)	906 (1.2%)	24,836	1,493 (6.0%)	23,127 (93.1%)	216 (0.9%)	0 (0.0)
교 육	23	31	47,674	28,606 (60.0%)	19,068 (40.0%)	-	180,669	134,275 (74.3%)	37,385 (20.7%)	0 (0.0)	9,009 (5.0%)
복지·문화	37	16	50,193	20,784 (41.4%)	28,484 (56.8%)	925 (1.8%)	52,508	23,096 (44.0%)	28,410 (54.1%)	955 (1.8%)	47 (0.1%)
참여·권리	22	13	3,731	250 (6.7%)	3,181 (85.3%)	300 (8.0%)	3,146	200 (6.4%)	2,426 (77.1%)	300 (9.5%)	220 (7.0%)

3) 청년정책에 대한 다소 낮은 인지도와 참여경험

- 2020년 기본법 이후 청년정책이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며, 이행기 상태의 청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이에 따른 정책 욕구에 따라 정책의 양적 확대가 대폭 이루어짐
- 청년의 다양성에 반응하여 정책 사업 종류도 확대되고, 각 개별사업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어느 정도 다변화된 욕구에 대응이 가능해졌으나 이러한 양적 확대는 정책의 접근 과정의 복잡성을 심화
- 2023년 121개 사업까지 확대되어 양적 축소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2024년 98개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2022년 부산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부산시가 추진하는 10대 주요 청년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0%에 육박



자료: 2022년 부산청년패널조사(2023)

〈그림 3-6〉 부산시 10대 청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2022년)

- 청년정책의 가지 수가 다양한데, 각 사업마다 대상, 조건, 신청시기 등이 달라 청년정책의 고 관심층마저도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신청시기를 놓쳐 정책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청년기는 유동성이 큰 시기로 정책 대상이었다가 정책 대상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시시각각 발생하고, 자신이 문제를 겪고 있는 시기에 적절하게 사업 신청을 받고 있지 못하게 됨
- 청년 정책의 양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정책 접근성이 낮아 정책지원이 절실한 취약청년 발굴 및 정책 코칭 기능 강화가 필요

-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참여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청년정책으로 묶이지는 않지만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이해도 높은 전문가의 컨설팅 기능이 중요
-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결국 각 분야별 깊이가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분야별 깊이를 높인다면 통합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어려워짐
- 실제 현재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이 청년정책과 관련한 통합적 교육도,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아닌 직원 복지 차원이나 청년들의 사회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정보에 대한 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음

4) 청년정책 지원기관의 기능별 분화에 따른 정책접근 어려움 해소 필요

- 청년 삶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전문화된 청년지원기관으로 인해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 따라 청년이 정책지원기관을 탐색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
 - 청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단시간에 다수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일자리, 창업, 문화 등 청년관련 지원기관이 산발적으로 구성되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청년지원기관이 전문화되어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운영
 - 제한된 자원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업별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작다보니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의 규모도 축소되고, 참여자가 지원받는 예산규모도 작아 정책에 대한 효능감 역시 높지 못함
- 부산시의 다양한 청년지원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성과이기도 하지만 청년지원기관들의 분화된 기능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움
 - 청년기는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종합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능적으로 분화된 지원을 받기위해 다양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야 함
- 정책간 연계도 부족
 - 정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부산시 청년디딤돌카드, 구군 자격증응시료지원, 도서구입비 지원 등 같은 분야 유사 목적의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참여자들이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광역-부산시-구군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

- 필요한 시기에 집중지원을 받지 못하고 분절적인 지원이 이뤄져 정책 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정책 첫 참여문턱이 높아 여러 지원제도를 통해 확인된 청년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별, 단계별로 지원이 검토될 필요
- 정책예산 규모가 작고, 신규참여자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하다보니, 중복, 기참여자 등 여러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

5) 광역 청년센터의 중간지원조직 역할 다소 부족

- 청년정책 종합지원센터, 거점센터로서 ‘부산청년센터’의 역할 부재 및 관련 사업 축소
 - ‘청년산학창업국→청년센터’로 이어지는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나 광역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어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진 못함
 - 행정체계로서의 중간지원조직, 집행체계로서의 센터 역할로 존재함
- 청년 참여 활동 증진 관련 주요 사업의 점진적 흐름을 보면, 실제적 지원은 점점 축소
 - 청년 참여와 활동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청년정책이 생겨나고 확장되어온 흐름에 따라, 부산청년센터는 청년활동생태계 조성, 정책 의제발굴, 정책지원(공간, 커뮤니티, 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등 청년의 활동을 위한 공간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데 사업 초점이 맞춰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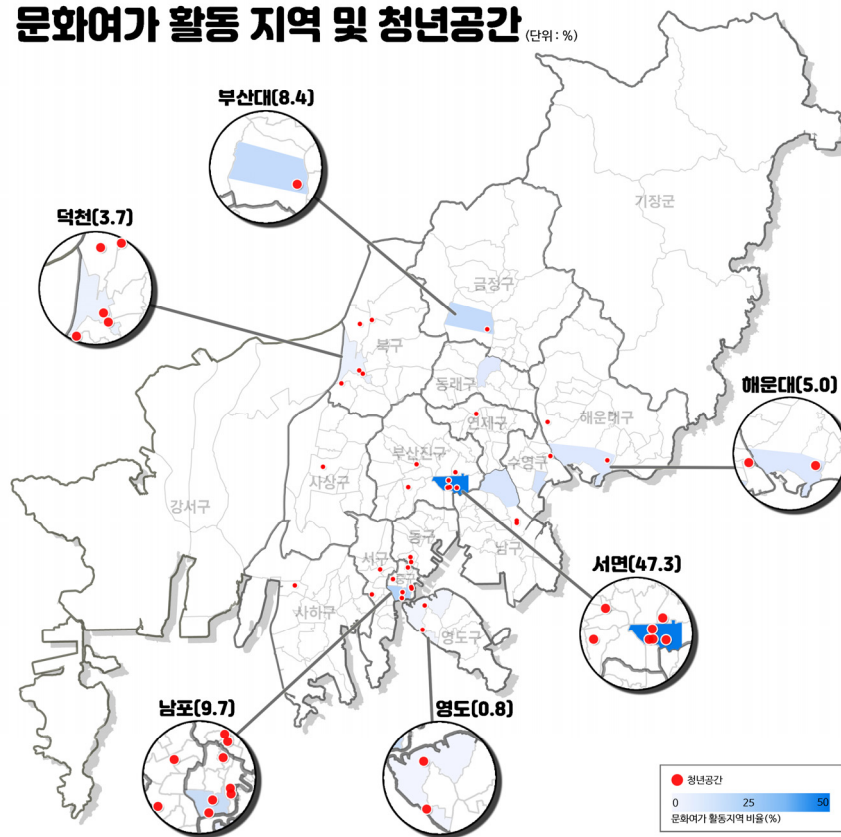
〈표 3-6〉 주요 청년 활동지원 사업의 변화 내용

사업명	운영내용	비고
청년정책네트워크	17년 62명>19년 116명>20년 234명 >21년 239명>22년 189명>23년 155명 >24년 75명 * 2021년 부산청정넷 결과자료집, 기사 발채	19년~23년까지 너른 참여 보장을 위해 공고시 모집인원을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2024년 모집인원이 대폭 축소
청년커뮤니티지원 (옹기종기)	2019년, 첫 시행년도 5인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 팀별 활동비 100만원 지원(65팀) 2024년, 현재 5인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재능기부형) 15팀, 팀별 150만원 지원 (공동체형) 4팀, 팀별 500만원 지원 (스터디형) 5팀, 팀별 100만원 지원 (자율형) 15팀 선정, 팀별 100만원 지원	- 청년활동지원,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의 초기 취지에 따라, 별도 구분없이 모집했으나 2023년부터 참여 유형이 구분되다가, 2024년 더욱 세분화 - 더욱 문턱이 높아짐.
청년자기주도형 프로젝트	2021년~2023년까지 운영 - 부산 거주, 활동하는 청년 개인 및 단체 - 청년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지원 500만원 이내 활동비 지원	2021년 부산청년센터 사업으로 신설된 사업으로, 소그룹 커뮤니티활동을 통해 진입한 청년이 보다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도하는 과정 중심의 지원사업이나, 2024년 폐지

- 청년센터가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대부분 형태는 교육,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임. 그러다 보니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만 일시적으로 청년이 참여할 뿐, 이들에 대한 별도의 케어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정책이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한 방법에 대한 기획기능이 다소 부족
- 청년정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생태계 구축 및 전달체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지역 청년들의 활동과 참여를 촉진하고 정책기획 주체로 성장을 지원
-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과 청년공간이 일치하지 않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 청년들이 주로 문화/여가활동을 하는 지역은 서면(47.3%)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청년센터는 자갈치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짐
 - 청년들의 주요 문화여가 활동 지역의 중심지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청년공간을 조성하여 활용성을 높일 필요

문화여가 활동 지역 및 청년공간

(단위: %)



자료: 2022년 부산청년패널조사(2023)

〈그림 3-7〉 부산 청년들의 주요 문화여가 활동 지역과 청년 공간 배치도

6) 사업별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한 정책 재구조화 필요

-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정책이 수요변화에 따라 청년정책사업의 수정이 요구될 때, 합당한 평가기준 및 합리적 평가를 통한 정책평가 이후 정책수정이 필요
- 합리적 평가도구를 통한 정책이행평가를 통한 정책변화가 요구됨
 - '23년 부산시 청년정책은 121개 사업에서 '24년 98개로 기존 사업 23개가 감소
 - 신규사업 마련 및 기존사업의 축소 등의 사업변경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은 있지만 변경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
-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5년간의 사업계획은 핵심과제를 토대로 지속추진 하되 사회변화에 따른 청년들의 수요변화를 고려하여 일부 변화가 필요할 수 있어 타당한 평가도구 마련이 필요

- 기본계획의 목적은 정책 지속성을 위하여 5년간의 추진과제, 사업을 기획하여 기본계획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청년시기의 경험하는 변화와 이에 따른 욕구가 비교적 빠르게 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정책은 가변성이 비교적 높을 수 있음
- 연차별 추진과제(시행계획 과제 등)를 구분하여 타당한 평가도구를 기반으로 매년 평가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 환류과정을 거쳐 정책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속과제 : 지난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있었던 과제
 - 신규과제 : 청년정책으로 새롭게 도입된 과제
 - 변경과제 : 지난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없었지만 인구정책, 산업정책 등 타 정책범주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다가 청년정책으로 범주만 변경된 과제 (청년정책 시행계획상 예산은 증가하나 실질적인 변화는 없음)
- 전문가, 청년당사자가 모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매년 청년정책의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매년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목적의 ‘청년정책이행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제4장. 청년정주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1. 정주 유도를 위한 청년 정책 개선 방안

1)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홍보강화

- 정주 의사가 높은 청년의 수요가 일자리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 내 풍부하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한 정책 강화
- 부산시가 추진 중인 ‘청끝기업’ 발굴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인식을 개선하여 지역 정주 유도(손헌일, 2024)
 - ‘청끝기업’이란 청년이 끌리는(뽑은, 일하고 싶은 기업) 기업을 선정하여 청년들에게 일하기 좋은 기업을 소개하는 정책
 - 2023년 부산 청년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다른 기업 유형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가 낮은 편(부산연구원, 2024)
 - 청끝기업 등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내 기업들이 청년친화형 기업으로 전환되기 위한 정책 강화 필요
-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선호가 높은 공공기관 유치 노력 강화
 - '23년 청년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취업 및 이직 시 상대적으로 경제적 보상 및 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공기업, 정부행정기관 포함)’ (40.5%)에 대한 일자리 선호도가 높음(부산연구원, 2024)
 - 공공기관 이전은 해당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효과 뿐 아니라 기관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지역내 유입을 촉진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부산의 전략산업과 연관성 높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책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대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유치를 통한 청년선호 일자리 확충
 - '23년 부산시는 대기업 3곳을 포함해 모두 26개 기업을 부산으로 유치(국내 대기업 3개, 국내 기업 20개, 외국인 투자 기업이 3개)하여 8,644명의 신규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
 -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한 지역 내 좋은 일자리 마련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기반을 확충할 필요

-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ICT 융합(에코델타시티), 금융·블록체인(문현금융단지), 미래차 R&D(녹산), 바이오(명지), 양자컴퓨터(센텀시티), 전력반도체(기장) 등 고부가 첨단산업 기업 유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을 통한 가덕도 공항복합시티 개발과 연계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신속 추진

2)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 대한 소득보전 및 자산형성 지원

-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열악한 복지를 보완하는 정책인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범위(적용대상 및 인원)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기대임금 부족분에 대한 보상을 지원
 - 청년들은 일자리 선택 시 ‘경제적 보상(임금과 복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23년 부산청년패널조사 응답자의 35.8%가 현재 직장의 ‘경제적 보상(임금과 복지)’에 불만족(부산연구원, 2024)
 - 부산은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들의 부산정주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소득 부족분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통해 부산지역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의사를 높일 필요
- 부산시가 현재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는 ‘일하는 기쁨카드’ 수급대상 및 지원인원 확대가 필요(손헌일, 2024)
 - 경기도의 경우 부산시의 ‘일하는 기쁨카드’와 유사한 사업에 청년1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인천시의 경우 부산시 ‘일하는 기쁨카드’의 지원금액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

〈표 4-1〉 타 광역 시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사례

■ 경기도

- 연간 1만명 정도의 청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을 추진
- 청년노동자에게 업무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을 유도

■ 인천광역시

- 관내 중소제조기업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복지지원금을 120만원 지원
- 중소제조기업 재직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근속을 유도

자료: 경기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검색(2024)

- 부산기쁨두배통장 등 자산형성 정책에 대한 소득요건 및 가입기간 완화를 통해 지역에 정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될 필요
 - 부산거주 청년 4천명(23년 기준)을 대상으로 ‘부산기쁨두배통장’ 사업을 추진 중
 - 가입기간(현 24개월 유지) 축소 및 가입금액(현 최대 720만원) 상향 필요
 - 고용지표 악화에 따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사회진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24개월 이상의 기준요건을 다소 완화할 필요
 - 청년들이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다 매력도를 높일 필요(부산의 경우 720만원 한도인 반면 서울 1,080만원, 대전 1,100만원 까지 적립 가능)
- 소득기준을 개인소득기준으로 적용을 검토할 필요
 - 개인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으로 인해 가입조건이 되지 않아 정책으로부터의 소외가 발생
 - 부산기쁨통장을 통해 형성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부산 정주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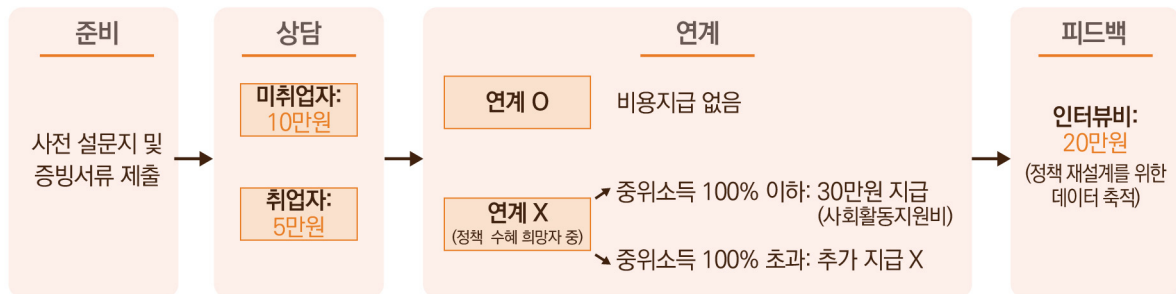
3)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마련

-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정책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
 - 부산청년패널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정책에 관한 정보 전달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 인식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정책접근성을 높일 필요
- 청년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각 기관의 고유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청년정책을 전달, 연결할 수 있는 제주 청년이어드림과 같은 사업을 발굴해 어떤 지원기관을 가더라도 해당 지원기관의 프로그램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 연결해줄 수 있도록 해야함
 - 제주형 청년보장제는 많은 청년정책들이 추진중이나 실제 정책 체감도가 낮고, 산재한 정책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 및 전달체계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정책 분류와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

- 청년이어드림은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결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

〈표 4-2〉 제주도 청년이어드림 개요

- (사업기간) '24.1.1.~12.31.
- (대상) 정책 코디네이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1,500명
※ 5개년간 '23년 청년인구 161천명의 10% 수준(16,000명) 달성을 목표
- (사업비) 450백만원
- (지급액) 미취업청년 10 ~ 60만원 / 취업청년 5 ~ 25만원
- (지급수단) 지역화폐(탐나는전) 지급
- (상담주기) 상담간(정책상담-정책재상담, 정책상담-피드백상담) 최소 30일
- (지급방식) 1단계(상담) - 2단계(연계) - 3단계(피드백) 단계별 지급
 - ① (1단계) 맞춤형 상담 완료 시 지급(미취업취업 차등 지급)⇒ (미취업) 10만원 / (취업) 5만원
 - ② (2단계) 연계 유무에 따라 지급방식 상이
 - 〈정책 연계 시〉
 - 비용지급 없음
 - 〈정책 연계 실패 시(정책연계 희망자 중)〉
 - (중위소득 100% 초과하거나 취업자) 비용 지급 없음
 -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미취업자) 사회활동지원비 30만원 지급
 - ③ (3단계) 정책 피드백 완료 시 20만원 지급
- 추진 흐름도



자료: 제주시 내부자료(2024)

- 청년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필요
 -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 획득에 익숙한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챗봇 서비스'를 확대
 - 청년지원 전담조직 간 정보교류 및 협업방안을 마련하여 꼼꼼한 정책 전달 체계 마련

4) 청년센터가 청년정책 통로가 되도록 역할 부여

- 광역청년센터를 중심으로 구·군 단위 청년센터 확대
 - 청년들에게 정확한 정책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정책 컨설턴트’를 양성
-
- ‘청년공간’이 청년정책의 중간지원체계로서 작동하며 적절한 정책서비스 제공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로서 기능 강화
 - 청년공간은 운영단체의 맥락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했지만, 청년 공간으로서의 공통사업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한계가 발견되는 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생태계 구축 및 전달체계의 역할을 강화
 - 청년세대 내 누구나 청년공간에 접속하고, 사회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류와 경험을 공간 안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훨씬 적극적인 도움과 지지가 필요
 - 부산청년센터의 기능과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센터 방문 청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이 중요
 - 청년패널조사 참여자의 67.8%는 청년센터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고, 청년공간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 중 65.0%는 청년공간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청년공간을 알고 있는 청년의 이용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부산연구원, 2024)
 -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공간 차원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시간 확보와 연속적인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공간 확보가 마련되어 청년들의 시공간을 넓히는 것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광역청년센터를 이전할 필요
 -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과 청년공간이 일치하지 않아 청년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 부산지역 내 구·군 단위센터에서도 광역센터가 제공하는 균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센터의 주요 사업이 발굴·구상되고 기초지자체 내의 센터를 통해 청년정책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함
 - 청년들에게 정확한 정책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정책 전달자(청년정책 컨설턴트) 양성을 통해 정책에 대한 확산 필요

- 청년매니저 도입 및 운영을 통해 정책 접근성을 높여 청년정책이 필요한 당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 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함
- 청년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청년정책 전달자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필요

5)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지표마련

- 정책의 효과를 진단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해당 목표 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 지표를 마련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
- 정책에 참여한 청년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
-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마련을 위한 ‘부산형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틀’을 구상
-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마련을 위한 ‘부산형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틀’을 구상
-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만큼 청년들의 정책수요도 변화가 빠름
- 청년들의 정책수요가 반영된 시의성 높은 정책 추진이 중요

〈표 4-3〉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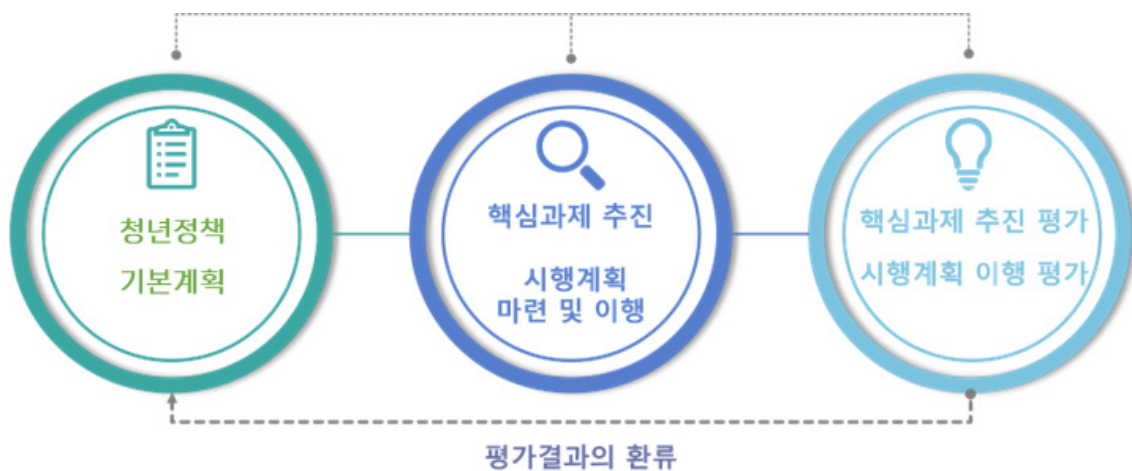
진단 항목	진단 지표	구분	진단 기준	진단 방법
계획 수립	대상자 부합성	정량	대상자 중 청년층 비율	정책사업의 전체 지원 대상 중 청년층(19-34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① 50% 미만인 경우 하, ②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중, ③80% 이상인 경우 상으로 진단
	대상자 포괄성	정량	청년층 사업 수혜율	전체 청년 사업 대상자의 응답결과를 4분위수(quartile)로 도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①하, ②중하, ③중상, ④상으로 진단
집행 과정	자원 투입의 충분성	정성	1인당 투입 사업예산	사업 예산, 수혜율, 사업참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원투입의 충분성 진단
	정책 환류의 충실성	정량	모니터링단 구성여부 및 청년 참여 여부	사업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①하, 모니터링단이 존재하지만 청년이 모니터링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②중, ③모니터링이 존재하며 청년이 참여하는 경우 상으로 진단
성과 달성	정책 효과성	정량	해당정책이 도움 된다고 응답한 비율	전체 청년 사업 대상자의 응답결과를 4분위수(quartile)로 도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①하, ②중하, ③중상, ④상으로 진단

진단 항목	진단 지표	구분	진단 기준	진단 방법
	정책 인지도	정량	청년층 정책 인지도	전체 청년 사업 대상자의 응답결과를 4분위수(quartile)로 도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①하, ②중하, ③중상, ④상으로 진단
	정책 효율성	정성	비용대비 목표 달성도	목표 달성도의 비용대비 적정성 진단

자료: 김기현 외(2020)

6) 청년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 정책 효과성을 진단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 마련을 통해 핵심정책에 집중할 필요
 -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정에 대한 관리 필요
 - 정책에 참여한 청년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방안 고려
- 부산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틀’ 마련
 - 부산의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틀 개발을 위한 연구 고려
 -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실효성 분석틀 마련을 통해 개별 사업을 전문가들이 평가
 - 분석틀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및 비중을 조절



〈그림 4-1〉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환류체계

2. 정책제언

1) 부산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핵심정책 마련

- 부산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마련할 필요
 -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가 종합정책으로 확장 되었지만 부산시의 재정적 한계로 정책별 획기적인 예산 투입이 어려운 한계
- 청년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핵심 정책 마련
 -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형화하고, 구분된 유형별 핵심 정책을 발굴
 -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재설계
 - 핵심정책에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적 효능감을 높일 필요
- 청년당사자들과의 숙의과정을 통해 청년정책을 핵심사업 중심으로 수정하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
 -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핵심정책 중심으로 정책 재편을 고려하여 설계 필요

2) 청년정책 관련 주체들간의 소통활성화 필요

- 실질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을 현장에서 안내하는 매니저 및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가 보장 필요
- 청년정책의 전문가 역할을 현장 인력에게 부여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위해 광역 단위 정책을 통한 전문 직무 교육이 필요
- 민간 차원의 청년 복지 영역과 청년정책 직무 간 연계성 확보 및 협업체계 강화 필요
- 청년센터가 부처 간 정책 차이를 완화하여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광역 단위 청년정책 수요자에게 보편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분된 유형별 핵심 정책을 발굴을 주도할 필요

3) 청년정책 체감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확보 필요

- 청년들의 체감성 높은 정책을 통해 부산시의 청년관련 문제(예를 들면 정주)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추진은 필수적으로 예산문제를 수반
- 청년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지역의 청년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이 장기적으로는 고려될 필요
- 지역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예산마련 노력 및 (가칭)지역 청년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의 기업, 시민, 부산시가 참여하는 공동

기금 마련을 통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확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재원마련 노력이 필요

- 부산사회연대기금 사례와 같이 부산지역 기업이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부산시와 함께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4)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

- 청년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
- 현재 부산시가 수행하는 ‘청년패널조사’의 연속적인 수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청년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뿐 아니라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제공하는 데이터와 같이 다양한 청년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함
- 전달체계는 청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사업을 연결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정책 재설계(환류)는 전문적인 연구자들에게 맡기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

참고문헌

- 김기현 · 차세영·이승호·김문길·박미선, 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손헌일 · 김세현·서옥순·오재환·김경수·김경민·김수영, 2023. 2022년 부산 청년패널조사, 부산연구원.
- 손헌일 · 김민경·김세현·서옥순·허종배·김경민·전보연, 2024. 2023 부산 청년패널조사 결과보고서, 부산연구원.
- 손헌일, 2022.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부산의 가능성과 대전환.” BDI 정책포커스, 406호, 1-16.
- 손헌일, 2023. “청년에게 힘이 되는 도시’를 위한 부산 청년정책 추진 방안.” BDI 정책포커스, 420호, 1-12.
- 손헌일, 2024. “부산청년패널조사로 살펴본 부산청년의 노동실태와 정책방안.” BDI 정책포커스, 429호, 1-12.
- 부산광역시, 2023. 부산광역시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 부산노동권익센터, 2024. 부산 노동 통계. 부산노동권익센터.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4.07.23.)
-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검색일: 2024.8.1.)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검색일: 2024.8.1.)
-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검색일: 2024.8.2.)
- 통계청 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검색일: 2024.8.2.)

부록

1. 부산시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정책 현황

1) 일자리·창업 분야

〈부산시 청년기본계획 일자리·창업 관련 주요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과제	55개 사업	기간	예산	비고
❶ 청년과 지역 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청결기업 발굴매칭 및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24~'28	2,300	신규
	청년 잡(JOB) 성장프로젝트 사업	'24~'28	15,700	신규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24~'28	8,900	
	청년 글로벌 잡(JOB) 챌린지 프로젝트 추진	'24~'28	14,000	신규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24~'28	300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24~'28	5,915	
❷ 청년이 창업에 성 공하기 좋은 환경 조성	창업카페 운영	'24~'28	900	
	초기창업 보육센터 운영	'24~'28	3,725	
	e-커머스 비즈센터 운영	'24~'28	1,457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24~'26	6,300	
	부산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24~'26	28,500	
	부산U창업패키지 추진	'24~'27	800	신규
	초초기 자금 지원(엔젤펀드 등)	'24~'28	2,737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24~'28	3,250	
소계			94,784	전체 예산의 5.0%

2) 주거 분야

〈부산시 청년기본계획 주거 관련 주요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과제	사업	기간	예산	비고
❶ 청년맞춤 공공 주택 확대	청년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	'24~'25	74,180	
	희망더함 주택 공급	'24~'28	5,200	
	신혼부부 렉키7 하우스 지원	'24~'28	6,674	
	부산형 청년 원가주택	'24~'28	-	신규

②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28	49,067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4~'28	8,00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4~'28	5,500	
③ 청년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청년 안심주거 보안망(인프라) 구축	'24~'28	1,000	신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종합지원	'24~'27	11,390	신규
	주거복지센터 운영 (청년 주거상담 매니저 도입)	'24~'28	2,800	신규
소계			163,811	전체예산의 8.6%

3) 교육 분야

〈부산시 청년기본계획 교육 관련 주요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15개과제	55개 사업	기간	예산	비고
① 지역 수요가 반영된 대학 교육 혁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25~'28	880,000	
	글로벌대학30 육성 지원	'24~'28	501,800	
② 교육-일자리 연계로 진로 탐색 지원 강화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운영	'24~'28	6,000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24~'28	9,000	
③ 디지털 전환 및 청년 성장지원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BDIA) 운영	'24~'26	89,600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24~'28	3,662	
	학자금 대출이자 WLDNJS	'24~'28	1,610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24~'28	900	
	천원의 아침밥 지원	'24~'28	750	
소계			1,493,322	전체예산의 78.2%

4) 문화·복지 분야

〈부산시 청년기본계획 문화·복지 관련 주요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과제	사업	기간	예산	비고
① 청년 문화 향유 및 창작활동 기반 내실화	청년문화축제 개최	'24~'28	2,000	
	청년만원문화패스	'24~'28	4,700	신규
	청년문화육성 지원사업	'24~'28	3,700	
	부산청년문화공간 청년작당소 운영	'24~'28	1,220	
	사상인디스테이션,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24~'28	2,300	

❷청년의 든든한 출발 지원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24~'28	74,100	
	청년 신용회복 지원	'24~'28	2,000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정착금+자립수당)	'24~'28	34,580	
소계			잘못된 계산식	

5) 청년참여 분야

〈부산시 청년기본계획 참여 관련 주요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15개과제	55개 사업	기간	예산	비고
❶마음부터 건강한 일상까지 청년 활력 제고	新취약청년(가족돌봄고, 립은둔) 전담지원 시범사업	'24~'28	4,250	신규
	청년마음이음사업	'24~'28	2,000	
	청년도전지원사업	'24~'28	6,860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24~'28	1,500	
	다다름사업	'24~'28	390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24~'28	700	
❷청년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부산광역시각종위원회위촉직에청년위원참여확대	'24~'28	-	신규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24~'28	300	
	청년활동 마일리지 제도	'24~'28	480	신규
	부산청년센터 운영	'24~'28	2,890	
❸지역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위한 역량강화	한미일 자매도시 청년서밋 개최	'25~'28	2,000	신규
	부산시 청년책임관제 운영	'24~'28	49	
	청년멘토단 운영	'24~'28	230	신규
	청년정책 온·오프라인 홍보	'24~'28	880	
소계			22,529	

인사이트 2024-12-200

부산 청년의 정주유도 지원체계 개선방안

저 자 손헌일, 김세현, 김아진
발 행 인 신현석
발 행 일 2024년 12월
발 행 처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우)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8,9F
☎ (051)860-8600, FAX (051)860-8619
홈페이지 <http://www.bdi.re.kr>

I S B N 979-11-6886-200-5 9330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